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체제를 지탱시켜 주는 요인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은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급격한 변화와 붕괴 현상을 목격하면서 정부와 언론 및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북한 연구자들조차 북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예상했다.¹⁾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199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변화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 참가한 영국 출신 학자인 포스터-카터(Eidan Foster-Carter)는 “1995년까지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면 필자로서는 대단히 놀랄 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Aidan Foster-Carter, “북한 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북한 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48쪽.

그러나 주지하듯이 아직도 북한에서는 체제이행²⁾이나 국가붕괴³⁾의 조짐을 볼 수 없다. 그동안 비교사회주의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와 급격한 변화, 그리고 붕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들을 개발해 왔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ezezinski)는 공산 국가의 위기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열 가지 지표를 제시했고, 위아

1996년, 북한 전문가에게 행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0명 중 8명이 5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4명은 5~10년 이내에, 그리고 21명은 10년 이내에는 붕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명은 2, 3년 안에 붕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나머지 사람은 10년 이내에는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일보』, 1996년 9월 22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Wan-Kyu Choi,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the Study of Change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 South Korean Perspective,” Chung-in Moon(ed.), *Understanding Regime Dynamics in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 pp.25~63; 김근식, “북한 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313~341쪽; 윤미량, “북한 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I』(서울: 한울, 2005), 75~112쪽 참조.

- 2) 체제이행(regime transition)은 하나의 정치체제와 다른 정치체제 사이의 공백기를 의미한다. 즉 시간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서 어떤 한 체제가 다른 한 체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체제전환(regime transformation)은 어떤 특정 체제가 다른 특정 체제로 완전히 변화된(완성)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은 체제의 변화(국가부문과 사회부문 간의 정치적 이익대표체계 및 매개양식인 정치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치체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정치제도 간의 관계, 통치자와 시민 간의 대표체계의 양식, 통치형태 등에 관한 공식적 규칙의 변화)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체제 이행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aniel N. Nelson, “Origins of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Donald H. Linden and Bert A. Rockman(eds.), *Elite Studies and Communist Polit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4), pp.168~169 참조.
- 3) 국가붕괴는 무력을 바탕으로 제반 법률적, 행정적 장치에 근거하여 특정 영토 내의 사회와 주민에 대해 배타적 지배를 행하며, 영토 내의 타 조직들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조직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I. W. Zartman(ed.), *Collapsed State: the Disintegration and Restoraton of Legitimate Authority*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1995), pp. 5~11 참조.

르다(Howard J. Wiarda)는 일곱 가지 위기변수를 중심으로 카스트로 정권의 위기와 붕괴 가능성 여부를 분석했다.⁴⁾ 다소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사회주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공산국가의 체제이행 요인은 ① 경제위기, ② 정통성의 상실, ③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④ 시민사회(반대세력의 역할)의 등장, ⑤ 서방과의 경쟁 등이다.⁵⁾

색슨버그(Steven Saxonberg)는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체제이행 요인은 각 국가의 이행시기와 과정 및 방식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이론적 자원으로서 혁명적 변화 현상을 설명

4) 브레진스키는 공산국가의 위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①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의 매력상실, ② 미래에 대한 사회적 비판론, ③ 생활수준의 하락, ④ 공산당의 사기 저하, ⑤ 종교 활동 증가, ⑥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충돌, ⑦ 경제부문의 사유화 증가, ⑧ 정치적 활성화 여부, ⑨ 아래로부터의 공개적인 다원화 요구, ⑩ 인권 문제에 수세를 취하는 정권 등 열 가지를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위기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폴란드(27)와 유고(22) 순이었고 북한(8)과 쿠바(15)는 비교적 낮은 순이었다. Zbigniew Bre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pp.234 ~ 235. 민족통일연구원은 브레진스키가 제시한 지표를 토대로 북한 체제의 내구력을 측정할 수 있는 15개의 지표(공식이념, 미래에 대한 비전,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엘리트의 사기, 엘리트의 갈등, 관료기구의 기능, 사적 경제영역, 생활수준, 대외경제관계, 사회통제, 정치적 반대, 반문화의 형성, 외부정보의 유입, 안보자원의 확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 체제의 위기지수가 2001 ~ 2008년 사이에 체제개혁 임계점을 통과하게 된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위아르다는 카스트로 정권의 위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① 이데올로기의 위기, ② 체도의 위기, ③ 사회의 위기, ④ 리더십의 위기, ⑤ 경제의 위기, ⑥ 국민사기의 위기, ⑦ 대외적 위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Howard J. Wiarda, "Is Next Cuba?: Crises of the Castro Regime," *Problems of Communism* (Jan.-April, 1991), pp.84 ~ 93.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slie Holmes, *Post-Communism: An Int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1 ~ 62 참조.

하는 선호위장이론(preference falsification theory)을 비롯한 합리적 선택 이론, 정치적 개방을 강조하는 신(新)토크벨리안적 접근법(지도부에 의한 정치적 기획의 개방), J-Curve 이론과 제도적 타협 모델, 그리고 신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⁶⁾ 이처럼 체제이행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체제이행 현상을 만족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의 정립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실제 일어났던 붕괴와 체제이행 사례를 보면 나라별로 체제이행 방식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요인 간의 영향력 차이도 적지 않다.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동구권의 경우에도 폴란드와 헝가리는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의 타협(제도적)을 통해 체제이행을 이루어낸 반면, 동독과 체코는 반대세력이 주도하는 대중시위를 통해 체제이행에 성공했다. 루마니아의 경우는 시민사회와 반대세력이 다른 동구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대중시위의 힘으로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전형인 차우세스쿠 정권을 붕괴시켰다.⁷⁾

그러나 색슨버그의 체제이행에 관한 대안적인 이론적 논의들과 동구의 다양한 체제이행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북한과 쿠바체제의 비(非)이행 현상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북한과 쿠바는 체

6) Steven Saxonberg, *The Fall: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d of Communism in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and Poland* (London: Routledge, 2001), pp. 3~64.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bid.*, pp.167~360;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235~365 참조.

체이행의 촉발요인들을 상당 부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이행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을까? 이들 국가는 동구와 다른 몇 가지 체제이행을 억압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 체제이행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기존의 체제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쿠바에서의 체제의 비이행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인들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북한과 쿠바는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각각 ‘고난의 행군’과 ‘특별한 시기(el periodo especial)’라는 용어가 시사하듯이 국가수립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에서는 생필품과 에너지 부족은 물론이고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다. 쿠바에서도 생필품과 에너지난으로 수도인 아바나가 공포와 부족, 좌절의 도시로 전락했다. 그러나 북한과 쿠바에서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이나 경제적 궁핍에 항의하는 대중시위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경제난을 경험한 동구의 지배세력과 노동자들의 대응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지배세력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반대세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지배세력 주도하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체제이행을 성공시켰다. 동독과 체코는 이와 달리 대중시위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이행을 성취했다.⁸⁾

8) 동구 4개국의 체제이행의 원인과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Steven Saxonberg, *ibid.*, pp.67 ~ 360;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ibid.*, pp.235 ~ 365; Roger Petersen, *East. Revolutions in Eastern Europe* (London: Pinter, 1992); Gale Stokes,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북한과 쿠바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이행과 아래로부터의 체제이행 현상 중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위로부터의 체제이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나라 기존체제의 특성 때문이고, 후자는 지속적인 대규모 대중시위의 부재와 비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정보 유통망의 부재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북한 체제의 지탱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북한과 쿠바의 정치체제의 유형과 체제이행 방식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 두 국가에서는 위로부터의 체제이행 현상을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왜 이 두 국가에서는 동구와 달리 만성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의 체제이행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지속적인 대규모 대중시위가 발생하지 않는가? 체제의 속성상 두 국가에서의 체제이행은 밑으로부터 나오는 힘, 즉 대중시위나 봉기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제의 내구력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대중시위의 부재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셋째, 체제를 지탱시켜 주는 지체의 긍정적 차원의 동력이 존재하는가? 현재 사회주의 4인방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혁명 과정에서 토착적 요인의 작용(국민혁명)이 있었고 이 요인이 동구와 다르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순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혁명과정에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소련의 역할이 컸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수립 과정에서 국민혁명적 요소가 미약했지만 혁명 이후 분단 상황과 주체사상을 활용하여 이 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

2.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유형과 체제이행 방식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특히 지도자 개인의 권위와 독재현상(지도자국가)이 심한 사회주의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전체주의 체제 또는 전체주의 검술탄 체제로 개념화할 때, 그 특징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안의 변화 현상도 전체주의 개념의 포기보다는 탈전체주의 체제(post-totalitarian regime)의 틀 속에서 볼 때,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린츠와 스테판(Juan J. Linz and Alfred Stepan)은 전체주의 체제의 변화 단계를 초기 탈전체주의 체제,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 성숙된 탈전체주의 체제로 세분화하고 있다.⁹⁾

주지하듯이 많은 학자들이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전체주의란 개념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풍미했던 소련, 이탈리아, 독일 및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된 새로운 독재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립된 것이다. 전체주의 독재는 20세기 산업사회에 적용된 독재정치, 즉 독재정치의 새로운 형태로서 현대의 정치적 및 기술적 조건하에서 전체주의자들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제체계이다. 이 체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① 공식 이론체계로 구성된 정교한 이데올로기, ② 독재자 1인이 영도하고 비교적 소수의 남녀로 구성된 단일대중정당, ③ 당과 비밀경찰의 통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테러체계, ④ 일체의 유효한 대중전달수단의 당과 정부 독점, ⑤ 모든 전투에 사용되는 유효한

9) 탈전체주의(초기, 동결 및 성숙된 탈전체주의) 현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ibid.*, pp.38~83; Ellen Frankel Paul, *Totalitarianism at the Crossroads* (New Brunswick: Social Philosophy Policy Center, 1990) 참조.

무기의 독점, ⑥ 전체 경제의 중앙 통제와 지휘 등이다.¹⁰⁾ 이 특징군들(syndromes)은 흔히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얽히고 상호 보완하는 특성의 집합을 이루고 있다.

샤피로(Leonard Schapiro)는 전체주의의 여섯 가지 특징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체주의적 현상을 특징적 면모(contour of polity)와 기축(pillar)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¹¹⁾ 그는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가 이 양자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샤피로는 전체주의의 특징적 면모로서 지도자, 법적 질서의 종속, 사적 도덕성의 통제, 동원과 대중적 지지에 기초한 정통성을 들고 있다. 기축으로서는 이데올로기, 당, 교회, 국가와 사회 등 지배수단을 들고 있으며, 전자 특히 지도자 개인을 지배수단보다 훨씬 중시하고 있다. 즉 전체주의 체제의 세 가지 원형은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대중운동에 의해 처음 형성되었고 이 대중운동이 지배엘리트와 당을 만들었다. 당은 단순한 지배의 수단인 것이다. 반면에 지도자는 만약 그가 없다면 세 가지 원형 모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이다. 당과 경찰, 이데올로기는 지배를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국가는 일종의 지도자국가(Leader state)¹²⁾인 것이다.

10) C. J. Friedrich and Z. K.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p.3. 린츠와 스테판은 일반적인 전체주의 개념 정의로서 ① 기존의 거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다원주의의 제거, ② 획일적이며 잘 구조화되어 있고 지도적 역할을 하는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의 존재, ③ 강력하고 광범위한 동원, ④ 카리스마적으로 지배하는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Linz and Stepan, *ibid.*, p.40.

11) Leonard Schapiro, *Totalitarianism* (New York: Praeger, 1972), pp.18~71.

12) 히틀러는 총통 겸 제국재상이라는 직함을 힌덴부르크 사후에 취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권위는 헌법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총통의 권위가 국가나 당이 아니라 국민의 통일된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그는 기존 국가제도

사피로의 전체주의이론은 독재자 개인의 비중을 다른 어떤 전체주의적 요소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때 소련에서는 독재자 개인보다는 공산당이 궁극적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정치국은 소규모의 당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독재자들은 국가의 실질적 통치자였다.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과거의 독재국가에서보다 한층 더 완벽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¹³⁾

전체주의 검 술탄 체제¹⁴⁾는 전체주의적 요소에다가 술탄 체제의 특징이 가미된 체제이다. 베버에 의하면 술탄 체제는 극단적인 형태의

를 통해서도 또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 요컨대 히틀러는 갖가지 대립적인 권위, 즉 국가, 당, 친위대, 육군, 산업의 최고 조정자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그것들 모두에 대한 무자비한 지배자였다. 히틀러는 그의 식탁 담화에서 종종 다른 무엇보다도 지도자국가(Führer Staat)가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지도자는 선거 혹은 만장일치에 의한 선출 후에는 국민의 지지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법적 혹은 기타 군에 의해 도전받을 수 없는 일종의 최고 권위를 갖는다. 그러한 지도자국가는 “몇 세기 동안이라도 존속 가능하다.” *ibid.*, pp.26~27.

13) Friedrich and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p.31.

14) 전체주의와 술탄 체제의 조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드문 경우만은 아니다. 조위트(Kenneth Jowitt)는 여러 레닌주의 체제의 세습주의적 속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그의 견해로는 소련과 루마니아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전에 강력한 세습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또한 1957년부터 1965년까지 루마니아 공산당에서도 술탄주의적 세습주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범주에서 북한과 쿠바 체제의 특성도 일정 부분 전체주의와 술탄 체제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세습주의적 성향을 갖는다. 세습국가는 통치자 개인 또는 그의 가족의 권위에서 연유하는 고도의 집중화된 권력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세습 국가의 통치자는 행정기구를 지배하고 정치적 권위를 규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에게 부과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찾는다. 이 체제하에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용되며 법과 제도보다는 개인 및 그 일족 중심의 지배가 보편화된다. 술탄적 정치체제는 술탄 개인의 영역인 것이다. 또한 이 체제하에서는 정교한 이데올로기보다는 매우 자의적인 상징조작을 통한 지도자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칭송이 보편화된다.

초기 탈전체주의 체제는 전체주의의 이념 형태에 아주 가깝지만,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구분 차원인 지도자에 대한 규범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체제의 원형과 구분된다.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는 부분적인 다원화 현상 등 탈전체주의적 변화를 보이다가 다시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동결된 상태를 의미한다.¹⁵⁾ 대체적으로 이 체제는 탈전체주의로의 이행 경로에서 쇠퇴에 의한 탈전체주의를 경험한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시민사회의 정권에 대한 일정한 비판이 허용되지만 여타 부분에서는 당-국가의 통제기제는 변함없이 장기간 지속된다. 그리고 전체주의 밖으로의 이행이 매우 어렵다.

성숙된 탈전체주의 체제는 탈전체주의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15) ‘동결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체코슬로바키아 체제가 탈전체주의 체제의 초기(다원주의와 관련하여 1989년의 불가리아에서처럼)도 성숙된 탈전체주의(1980년대 말의 헝가리에서처럼)로부터 유형 밖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inz and Stepan, *ibid.*, pp.42~51 참조.

되어 전체주의 체제에서보다 체제 내의 제도적 다원주의에 의해 훨씬 중요하고 복잡한 운영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공산당이 신성 불가침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체주의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원주의적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숙된 전체주의 체제하에서는 반대세력을 중심으로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및 문화와 구분되는 제2문화(second culture)와 국가의 통제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병행사회(parallel society)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전체주의 체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탈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숙된 탈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한다. 이 체제는 권위주의나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 가능성이 높은 체제이다.¹⁶⁾

린츠와 스테판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체제의 유형(성격)과 체제이행 방식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로부터의 평화적인 방식의 체제이행(협약에 의한 이행)은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체제이거나 전체주의 체제가 적어도 성숙된 탈전체주의 체제(matured post-totalitarian regime)로 진화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체제하에서만 이 체제 내의 온건파와 반대세력 내의 온건파가 협상과 협약을 할 수 있는 힘과 공동이익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협약에 의한 이행은 체제 내의 강경파와 개혁파, 그리고 반대세력에서의 온건파와 급진파 등 네 부류의 행위자가 벌이는 게임인 것이다.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은 두 가지 구조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조직화되고 국내적으로 알려져 있고 비폭력적인 민주적 집단의 존재, 둘째, 협약에 의한 개혁을

16) *ibid.*, pp.42~51.

교섭할 의사와 자율성이 있는 체제 내 온건파의 존재이다.¹⁷⁾

란츠와 스테판은 남미와 동구, 그리고 남유럽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비민주주의 체제 중 전체주의 체제(totalitarian regime)와 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totalitarian cum sultanistic regime), 그리고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frozen post-totalitarian regime)하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위로부터의 체제이행, 특히 타협과 협약에 의한 평화적인 방식의 체제이행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제에서는 위로부터의 협약에 의한 평화적 이행의 동기와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체제의 속성상 집권세력 내에 온건파가 존재할 수 없고 사회 내에서도 반대세력 자체가 조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설사 온건파가 존재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강경파에게 제거되고 말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하에서는 간부나 국가기구 자체가 최고지도자나 술탄의 뜻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직되고 통제받기 때문에 그들의 조직적 자율성은 있을 수 없으며 비폭력적 체제이행의 경로 자체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 비교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체제유형 분류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체제는 루마니아와 같은 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이며 쿠바는 전체주의 체제 이행의 2단계인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 겸 술탄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¹⁸⁾

일부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체제를 신정 체제, 유일지도 체제, 유격대국가 체제, 수령(절대주의) 체제, 조합주

17) *ibid.*, p.356.

18)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pp.13~17. 로페즈는 카스트로가 친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를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하고 카스트로의 우상화 정책이 강화되는 현상을 근거로 쿠바 체제가 술탄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다.

의적 사회주의 체제(가족적 조합주의), 군사국가(정규군) 체제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해 왔다.¹⁹⁾ 북한의 체제성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북한 체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북한 체제의 전체주의 체제로서의 보편적 현상을 간과하게 된다.

비록 북한 체제는 특정 시점이나 부문에서는 이른바 ‘북한적 특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령제와 자발적 순응과 동원기제, 가족적 조합주의, 세습주의, 선군정치 등의 현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비교사회주의 체제의 맥락 속에 포함할 수 있는 특수성이지만 완벽한 체제구분을 할 수 있는 배타적 특성은 아니다.

결국 북한과 쿠바처럼 전체주의(동결된) 겸 술탄 체제하의 체제이행은 아래로부터의 혁명, 즉 대중시위나 봉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린츠와 스테판은 전체주의(동결된) 체제하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체제이행 방식은 대중봉기이며 술탄 체제의 국내적 붕괴요인은 술탄의 암살 또는 무장집단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혁명 활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루마니아와 체코 및 동독의 체제이행이 폴란드나 헝가리와 달리 대중봉기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들 나라의 체제가 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이거나 동결된 탈전체주의 체제였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완규, “북한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 의적 관점,”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26~33쪽 참조.

3. 북한과 쿠바 체제의 지탱요인 비교분석

주지하듯이 정치체제의 특성상 북한과 쿠바는 지배집단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체제이행은 어렵다. 그렇다면 루마니아와 동독 및 체코에서와 같이 대중시위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체제이행은 가능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이행 방식과 과정을 연구해 온 학자들에 의하면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체제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반복되는 대중시위나 봉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나 쿠바의 ‘비이행 현상(체제의 지탱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이들 국가와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었던 루마니아, 동독, 체코에서는 지속적인 대중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반면 북한과 쿠바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사실 북한과 쿠바는 구소련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급격한 변화와 체제이행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 ‘특별한 시기’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이들 두 나라는 국가수립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다. 일종의 경제 붕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 이후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극심한 식량난, 생필품 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으며 에너지와 부품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은 20~30%로 격감했다.²⁰⁾

북한보다 소련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쿠바의 경제난도 심각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국내총생산의 40%가 감소했고 수출은 1989년 590억 불에서 1993년에는 190억 불로 줄었다. 수입도 1989년

20) 북한 경제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서울: 높이깊이, 2005) 참조.

의 810억 불에서 1993년에는 239억 불로 감소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쿠바에서는 에너지난으로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생필품과 식량부족으로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수도 아바나는 공포와 부족, 좌절로 채워진 도시로 전락했다. 카스트로는 ‘사회주의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성장 아니면 죽음을’로 바꾸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²¹⁾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과 쿠바는 서로 유사한 제한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두 나라는 다 같이 처음에는 소극적 개혁을 시도하다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보다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전환했고 개혁의 내용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달러벌이와 외자유치에 골몰했고 노동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며 농민시장을 설치하고 자영업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개혁과 개방정책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과 쿠바는 이미 밑으로부터의 체제이행 과정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체제이행을 경험한 동구 국가들보다 오히려 이들 두 국가가 먼저 밑으로부터의 체제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체제이행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1) 소련 붕괴 이후 쿠바가 직면한 경제난에 대해 자세한 것은 Ana Julia Jatar-Hausmann, *The Cuban Way: Capitalism, Communism and Confrontation* (West Hartport, Connecticut: Kumarian Press, 1999); Jorge I. Domínguez, et al.(eds.), *The Cuban Economy at the Start of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Jorge F.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New Brunswick: Transaction, 1995) 참조.

로페즈는 쿠바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대중시위의 부재 원인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북한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²⁾

첫째, 쿠바의 주민 대다수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체제이행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치적 신념이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체제이행의 동력은 지속적인 대규모 대중시위나 봉기에서 나온다. 다수의 주민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체제이행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캠벨(Angus Campbell)은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으로 개념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치적 효능감을 “개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²³⁾으로 정의하고 있다. 쉘보르스키(Adam Przeworski) 또한 독재체제의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체제변화에 있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참여 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⁴⁾ 이러한 현상을 쿠란(Timur Kuran)은 ‘선호위장이

22)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pp.55~84. 카클린(Rasma Karklins)과 피터슨(Roger Peterson)도 독재체제의 이행에 필요한 대중시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개개인들로 하여금 정치참여가 중요하고 시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집단행동이 실패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둘째, 대중들에게 시위 시간과 장소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asma Karklins and Roger Peterson, “Decision Calculus of Protesters and Regime: Eastern Europe 1989,” *Journal of Politics*, Vol.55, No.3(August, 1993), pp.599~601.

23) Angus Campbell, Gerald Gurin and Warren Miller, *The Voter Decides* (Evaston, Ill.: Row Peterson, 1954), p.187.

24) Adam Przeworski,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ransition to Democracy,” Guillermo O’Donnell, et al.(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론'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그는 기존 체제와 정권에 반대하는 여론과 조직이 확대되면 될수록 반대세력 또는 시위에 가담했을 때 오는 외적 비용이 선호위장에서 오는 내적 비용보다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쿠란에 의하면 바로 이 점이 혁명적 분기점(revolutionary threshold: RT)이 되는 것이다, 즉 정권과 체제에 반대하는 데서 오는 외적 비용(external cost: ET)이 선호위장 하는 데서 오는 내적 비용(internal cost: IT)보다 작아지는 상황($RT=EC<IC$)이 체제이행 혁명의 임계점이 되는 것이다.

체코나 동독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억압과 엄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는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신념이 더 강했다. 이미 헝가리나 폴란드에서의 공산주의의 실패 소식과 소련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체코 국민들은 자신의 체제이행에 대한 내적 선호를 드러내서 시위에 가담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둘째, 반체제 세력을 결집하고 반체제 집단과 시민을 연계시키며 대중시위를 독려할 수 있는 통신 및 정보 유통수단의 부재가 체제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거나 설사 있다고 해도 정부에 의해 그 통신 및 정보망이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규모의 대중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작동 없이는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여타의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 비해 시민사회의 힘이 현저하게 약했던 루마니아에서 인민봉기를 통한 체제이행의 길을 열 수 있었던

Perspecti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p.54~55.

25) Timur Kuran, *Private Truths. Public Lives: The Social Consequences of Preference Falsifi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p.3~102.

것은 헝가리 텔레비전이나 자유유럽 라디오 방송망과 외국 시민단체 인사들의 정보유통 작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²⁶⁾ 사실 루마니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하출판물(Samizdat)이 없었던 유일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서는 외국의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가 없었다. 그 덕택으로 동구에서의 공산주의의 붕괴소식이 그대로 루마니아인들에게 전달되었다. 티미소아라(Timisoara)에서 일어났던 시위사건도 외국의 통신망에 의해 즉각 루마니아 전역으로 유포되었다. 자유유럽 라디오 방송은 “오늘은 티미소아라에서, 내일은 루마니아 전역에서”라는 구호를 방송을 통해 계속 전파시켰다. 헝가리 TV는 루마니아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했고 헝가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통역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정보통신망의 위력은 대항문화와 조직 및 시민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던 다른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카르크린스(Rasma Karklins)와 피터슨(Roger Petersen)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사회 통신망이 시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²⁷⁾ 동구에서는 각종 TV 매체나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지하출판물을 통해 자국 내의 특정 지역 소식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의 움직임이나 시위 조직과 동원 정보 등이 대중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었다. 요컨대 외국의 라디오와 TV 매체 방송과 국내에서 제작

26) 루마니아에서 대중봉기에 의한 차우세스쿠 정권의 몰락과정에 대한 논의는 Linz an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pp.344~365; Andrei Codrescu, *The Hole in the Flag: A Romanian Exile's Story of Return and Revolution* (New York: William Morrow, 1991); Trond Giberger,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Romania: The Rise and Fall of Ceausescu's Personal Dictatorship*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참조.

27) Rasma Karklins and Roger Petersen, “Decision Calculus of Protesters and Regime: Eastern Europe 1989,” pp.588~612.

된 지하신문을 통한 시위 소식과 정보 확산이 동구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특히 동독 사람들의 80% 이상이 서독 TV를 시청했고 동독의 정보보다는 서독의 정보에 더 의존했다. 체코에서는 초기에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전파 장애가 효과를 거두었으나 시골 지역에서는 BBC나 자유유럽 방송을 방해 없이 청취할 수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체코인 77%가 자유유럽 방송을 들은 적이 있었다.²⁸⁾

그렇다면 쿠바와 북한의 주민들은 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아사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와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들은 체제이행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두 국가의 주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게 된 주된 원인은 오랫동안 전체주의적 강압통치와 통제 및 비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의 부재 때문이다.

대다수의 쿠바 주민들은 카스트로 정권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억압통치를 경험했다. 몇 차례의 정권변화 시도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평화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권에 반대했던 많은 쿠바인들이 죽었다. 카스트로 정권은 2004년까지 2만 400명의 쿠바인들을 정식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형시키거나 교도관들이 살해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1959년 이래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정치범으로 있었다.²⁹⁾ 쿠바에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보도에 의하면 대다수 쿠바인들이 희망 없는 생활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길은 쿠바를 떠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997년 쿠바의 시민권을 위한 국민회의(National Council for Civil Right)가 조사한 내

28)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pp.71~72.

29) *ibid.*, p.61.

용을 보면 응답자 41%의 첫 번째 희망이 쿠바를 떠나는 것이고 18%만이 쿠바에 남아 정치적 변화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한 조사에 의하면 쿠바의 청소년들도 카스트로 정권을 싫어하지만 정치행동을 통해 체제이행을 추구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한마디로 쿠바의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는 강력한 국가와 미약한 사회로 특징화할 수 있다. 국가의 강제력과 억압이 정권과 체제를 지탱시켜 주는 가장 확실한 힘인 것이다.

국민여론조사연구소(Centro de Estudios para una Opcion Nacional)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쿠바인들이 반체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① 시민사회집단과 대중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 ② 억압에 대한 공포, ③ 쿠바인들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는 정치적 무력감 때문이다.³¹⁾ 그리고 대중의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운동가들과 대중들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쿠바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사실 쿠바 내 150여 개로 추산되는 반체제집단은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시위나 생필품 보장을 위한 시위 그리고 단식농성 등 시민사회의 성공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쿠바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쿠바에서 자유유럽 방송에 해당하는 방송망은 라디오 마르티와 TV 마르티다. 쿠바의 라디오나 TV의 보급률은 북한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다. 그러나 카스트로 정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 정보통신망을 전파방해(jamming) 장치를 동원하여 차단시키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TV를 갖고 있는 쿠바 국민

30) *ibid.*, pp.60~62.

31) *ibid.*, p.63.

96%가 TV 마르티에 접근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비록 TV에 접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시청 시간이 5분을 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TV 마르티 외에 스페인어로 방영하는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2% 미만이고 CNN 시청률은 3% 정도였다.³²⁾

동구공산국가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지하출판물을 쿠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쿠바인들은 외국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 등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공공기관, 과학자나 교수들에게만 인터넷을 허용했는데 그 수는 3만 3,000명 정도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정보는 사전에 검열하며 차단되기도 한다. 쿠바 내에서 출간되는 지하출판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지하출판물이 나와도 그 양이 매우 적으며 단 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통제가 심하고 안정적 자금원이 없기 때문이다.³³⁾

이와 같은 카스트로 정권의 사회통제는 구소련과 동구공산국가의 체제이행 이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의 핵심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 개혁·개방정책을 선도한 구소련과 동구국가들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 번째 교훈은 정치적 개혁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핵심 지도부가 먼저 당하기 전에 가급적 초기에 당 내의 불만 세력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교훈은 잠재적 또는 명백하게 드러난 불충 세력을 가혹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교훈은 반대세력을 공식적으로 조직하도록 허용하지

32) *loc. cit.*

33)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pp.65~82.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카스트로는 이 교훈을 토대로 쿠바인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가 대중시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은 쿠바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우선 정치체제가 쿠바에 비해 현저하게 경직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는 동결된 탈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인 데 반해서 북한의 체제는 루마니아와 같은 전체주의 겸 술탄 체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주민통제와 억압기제의 수준도 쿠바보다 높다. 북한사회에서는 아예 반체제 세력이나 집단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1956년의 종파투쟁과 1968년의 김일성 자파 내의 숙청사건도 체제전복보다는 일종의 노선투쟁이었다. 더욱이 북한에는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반체제적 대중운동이나 시위의 경험, 그러한 운동과 시위를 지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물, 특히 공산주의나 주체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³⁵⁾

사실 북한이 국가 수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정권이나 체제가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 원인은 북한 체제 특유의 사회통제 및 감시체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³⁶⁾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통제된 사회이

34) Jorge I. Dominguez, "The Secrets of Castro's Staying Power," *Foreign Affairs* (Spring 1993), p. 99.

35)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통권 제 21호(1990년 5월), 57쪽.

36) 최근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변화』(서울: 한국방송, 2005), 10~98쪽 참조.

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외교관이었던 현성일은 북한의 주민통제 및 감시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북한 땅에서 태어난 자는 정신장애자와 범죄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든 빠짐없이 당과 기타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죽는 날까지 평생 조직생활을 해야 하며 사회생활과 개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통제를 받거나 갖가지 규율에 속박되고, 각종 독재기구의 2중 3중의 감시 속에 오로지 당과 수령에 대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통제 및 감시체계는 단순한 피라미드식 종적 체계가 아니라 감시자와 감시대상, 통제자와 통제대상이 따로 없는 모든 고위층과 주민들의 상호 감시와 통제, 상호 견제의 복잡하고 치밀한 조직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에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 향유자는 오직 김정일뿐이다. 북한의 통제 및 감시체계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자체의 수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일 개인독재체제의 수호를 기본 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소련과 동구권 및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통제 및 감시체계와 그 구조적 성격과 내용, 형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³⁷⁾

현성일은 북한의 구체적인 감시 및 통제체제로서 ① 당원들의 당 생활 지도를 통한 감시 및 통제체계(당 생활 총화제도, 각종 지도, 검열, 회의 등을 통한 통제체계, 평정서에 의한 통제 및 감시), ② 사회 전반에

37)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2쪽.

대한 당의 정책적 지도체계(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체계, 각급 당 조직들을 통한 지도체계), ③ 근로단체조직들을 통한 주민통제체계(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기타 근로단체 조직들), ④ 입당 및 각종 인사권을 통한 통제체계(입당을 통한 통제체계, 인사권을 통한 통제체계), ⑤ 고위층의 상호 감시 및 통제체계(김정일 측근과 비측근 사이의 상호 견제, 김정일 측근들의 상호 감시 및 통제체계, 고위 간부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체계, 간부들의 사상교육체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통제 및 감시체계 중에서도 김정일은 특히 권력 중심부 인사들, 측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중시했다. 권력핵심세력과 지배집단에 대한 통제는 보상³⁸⁾과 처벌이 병행된다. 왜냐하면 권력 핵심부에 근접한 인사일수록 정치적 도전세력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특정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추종세력을 만드는 인사(파벌형성), 그리고 조세웅(함경북도 및 평안북도 도당 책임비서 역임)과 같이 도내 인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은 철저하게 견제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도 일단 퇴근하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서로 자유롭게 방문할 수가 없으며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된 서기들과 운전기사들도 자기가 모시는 간부들과 가족들의 모든 동향을 매일 해당 보고선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³⁹⁾ 북한에서는 “자기 등짝도 못 믿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많은

38) 미에프(Vasily Mikheev)에 의하면 북한에는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는 친정경제(royal court economy) 부문이 있다. 이 경제는 북한의 지배계급의 경제, 정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안된 것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배층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Vasily Mikheev,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quirements, Plans and Hop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V, No.1 (Summer 1993), pp.81 ~ 95.

39) 현성일의 증언(2006년 5월 22일).

주민들은 방에 혼자 앉아서도 불만을 토로할 수 없을 만큼 감시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사회구성원들의 계급분류를 통해서도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왔다.⁴⁰⁾ 주지하듯이 북한은 계급을 기본계급, 동요계급, 적대계급으로 나누어 관리, 통제한다. 여기서 동요계급(일제기관이나 적대계급에 복무했거나 혜택을 입은 자들 중 북한 체제 수립 이후 재산이나 기득권을 잃은 공무원과 인텔리들, 민족자본가들과 개인수공업자 및 소상공인들, 월남자 가족 중 북한에 협력한 자, 북송교포들과 가족)과 적대계급(일제 시기 일본군이나 경찰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복무한 친일파들과 지주, 부농, 매판자본가와 예속자본가 및 친일기업인들과 상인들, 6·25 당시 남한과 미국 측에 적극 가담 및 협력한 반동분자들과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철저히 감시 통제당하고 있다. 나아가 적대계급은 다시 본인들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교양대상, 혹은 포섭대상, 고립대상, 청산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처럼 철저한 감시와 통제 메커니즘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은 정권과 체제, 김정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는커녕 마음속에서조차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불만이 있다고 해도 계층별로 차이는 있지만, 체제이행보다는 배급제가 제대로 실시되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설사 체제이행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정권과 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처벌이 워낙 엄격하고 잔인해서 주민들로서는 자신의 선히를 위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⁴¹⁾에 의하면 1997년에 일어난 황철사건(황해체철소, 또는 송림시당 사건)과 1999년에 일어난 혜산사건

40) 현성일, “북한의 인사제도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2권 1호(1998), 5~7쪽.

41) 김OO, 한XX의 증언내용을 보면 두 사건의 시말에 대한 내용이 일치함.

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인민군 보위사령부를 동원한 관련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무자비한 처벌과 즉결 처형을 통해서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지도부는 정권과 체제안보의 의지를 북한의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일부 북한 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감시 및 통제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시장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국가의 공식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비공식 경제가 확산되고 지방차원의 당과 행정기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완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졌다. 그리고 주민들, 특히 인텔리들과 동요계급이나 적대계급 사이에서 서서히 체제와 정권,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낙서나 뼈리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⁴²⁾ 그러나 아직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정치적 차원보다는 일상생활형의 불만과 저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배층에 대한 불만도 김정일에 직접적인 불만 표출보다는 중간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다.

한 주목할 만한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는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궁핍의 시기였던 데 반해서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 핵심세력들에게는 고난의 행군 시기가 반당, 반혁명분자, 권력 대열 내에 장기간 잠복하고 있던 간첩과 정적들을 색출해 내는 정치투쟁의

4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서재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박형중, 『북한의 개혁, 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서울: 해남, 2004), 117~176쪽 참조.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군대가 얻어맞았고 그 다음에는 사로칭이 정화대상이 되었다. 그런 연후에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당의 순으로 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권력기관이 한 차례씩 정화대상이 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이탈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 및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위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이탈주민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시기와 이후에 다른 국가기관은 대체로 20~30% 정도 축소시켰지만 보위기관이나 보안기관은 인원을 더 보강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위부와 안전성은 현대적 수사 장비를 수입하고 있다. 이제 보안처 보위부도 휴대용 무선기로 호출하는 수준이 되었다. 북한 당국은 감시 및 통제에 필요한 장비를 질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⁴⁴⁾

또한 대중의 정치적 효능감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도 북한은 쿠바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한 형편이다. 북한의 경우, 정부를 제외하면 그 어떤 경우도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없다. 북한의 전화체계는 국가에 의해서 관리된다. 특히 외부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제전화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지하출판물 역시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설사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이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유통시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이동 폭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고프만(Erving Goffman)이 개념화한 일종의 폐쇄조직(total institution) 사회인 것이다.⁴⁵⁾ 고프만이 말하는 폐쇄조직은 외

43) 이탈주민 한XX의 증언(2005년 5월 27일).

44) 북한이탈주민 김OO의 증언(2005년 11월 12일).

부 사회와의 사회적 교류가 제한을 받으며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높은 벽이 있으며 철조망이 쳐 있고 절벽, 물, 숲, 늪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곳이다. 물론 북한이 완벽한 폐쇄 사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폐쇄 사회의 중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동안 한국의 대북방송과 휴전선에서의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 동구에서의 자유유럽 방송, 쿠바에서의 라디오 마르티와 TV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했었다. 그러나 남한이 주도하는 이러한 방송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자유화를 겨냥한 방송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방송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은 라디오나 TV를 기술적으로 조작해서 남한의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 유학생과 외교관, 국영기업의 외화벌이 일꾼, 별목공 등 외국여행을 경험한 사람들과 남한 측 인사들로부터 해외나 남한 사회의 소식이 일부 전해지기도 하지만 접촉 폭이 협소해서 그 영향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고위층과 일부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용천역 사건 이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쿠바와 북한에서 체제이행의 징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요인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쿠바와 북한의 지배집단은 모두 반제국주의적인 민족적 정서를 자극해서 국민적 일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왔다. 이들 두 국가 모두 체제건설과정의 주역들이 제국주의 세력과 투쟁한 경력이 있다.

45) Erving Goffman, *Asylum: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New York: Anchor Books, 1961); 서재진,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110쪽에서 재인용.

그동안 양국의 집권세력은 이러한 투쟁 경력을 권력 강화와 대중동원에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쿠바의 ‘시에라 마에스트라(Sierra Maestra)’와 북한의 ‘백두산 밀영’은 이러한 정치수사적 상징의 중심이다.

쿠바에서의 비이행 현상을 설명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동구와 달리 쿠바는 독재체제의 기원에 있어서의 차이를 주장한다. 쿠바의 독재체제는 국민혁명의 결과지만 동구 공산주의는 소련이 강제로 부과한 것(소비에트화)이라는 것이다. 로페즈는 이러한 사실을 토착 가설(homegrown hypothesis)로 설명하고 있다.⁴⁶⁾ 도밍기에즈(Jorge I. Domínguez)는 카스트로 정권이 유지되는 중요한 비결 중의 하나가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쿠바 국민들의 지지라고 주장한다.⁴⁷⁾

실제로 1959년 바티스타 정권을 국민혁명으로 붕괴시킨 이후 카스트로는 사회의 모든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혁했다. 농업 및 도시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형평적 삶의 기반을 조성했고, 보다 평등한 배분 소득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생산권을 국유화 내지 집단화시켰다. 또한 국민복지 혜택의 확대를 통해서 보건 의료 및 교육체계를 일신시켰다. 구 소련의 붕괴로 ‘특별한 시기’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체제가 내세우는 새로운 사회체제와 실제의 쿠바 상황은 비교적 높은 친화력이 있었다. 대부분의 쿠바 국민들은 이러한 카스트로의 개혁을

46)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p.18.

47) Jorge I. Domínguez, “The Secrets of Castro’s Staying Power,” pp.97~98. 또 다른 한 연구에 의하면 카스트로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권력 축 때문이다. 즉 ① 카스트로(Caudillo), ② 국민혁명, ③ 전체주의적 국가기구, ④ 소련의 지원 등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카스트로 권력 축을 제외한 다른 권력 축은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카스트로의 나이를 고려하면 카스트로 요인도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다. Edward Gonzalez and Kevin F. McCarthy, *Cuba After Castro: Legacies, Challenge, and Impediments* (Santa Monica, California: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2004), pp.7~32.

통해서 바티스타 정권 시기의 종속적 자본주의 체제에 기초한 계급체제에서의 생활보다 훨씬 향상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⁴⁸⁾ 카스트로 정권의 정통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도 쿠바 국민 대다수는 심각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종속적 경제체제에 편입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쿠바체제 조치 법안인 토리첼리 법안(Torricelli Act)과 헬름스 버튼 법안(Helms-Burton Law)이 통과된 후 오히려 쿠바 내에서 카스트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역설이 현실화되었다.⁴⁹⁾

쿠바와 달리 북한의 국가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동구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소비에트화 정책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배집단은 항일 빨치산 투쟁 경력을 신화화시켜 정권 출범과정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항일 빨치산 투쟁을 주체사상과 접목시키고, 또 이 사상과 민족통일을 연계시킴으로써 한 국민족주의와 통일 구현의 중심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대의명분을 토대로 북한의 주민을 동원하고 일체화(집단화)시켜 왔으며 경제적 궁핍까지도 감내하도록 했다. 또한 쿠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전략을 통해서도 주민의 단결과 동원을 도모해 왔다.

북한을 연구해 온 일부 학자들도 북한 지배세력의 이러한 정치적

4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se A. Moreno, "From Capitalist to Socialist Culture, and Back to Capitalist Values?" in Max A. Azcri and Elsis Deal(eds.), *Cuban Socialism in a New Century: Adversity, Survival, and Renewal* (Gaineville: Press of Florida, 2004), pp.51~61. 특히 쿠바의 보건 의료체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Susan Eva Eckstein, *Back from the Future: Cuba under Castro*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129~139 참조.

49) 이에 대한 설명은 Ana Julia Jata-Hausmann, *The Cuban Way*, pp.91~146 참조.

대의명분을 활용한 자발적 사회통제 기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발적 통제기제가 북한이 체제이행 없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위기를 극복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정영철은 북한의 수령제 사회체제는 사회통제 기제로서 사상의 정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의 통제는 ① 각 개인이 속한 조직을 통한 통제와, ② 행정기관과 공장 기업소를 통한 통제, ③ 경찰기관을 통한 통제와 감시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억압적 사회통제에 치우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상적, 문화적, 도덕적 통제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⁵⁰⁾ 사실 김정일도 소련 및 동구사회의 체제가 붕괴된 주요인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상무장의 해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는 사상교양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패, 사회주의 기본원칙 고수의 실패,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에 의한 관료주의와 세도주의의 만연, 내부에 있는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 책동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⁵¹⁾

최봉대는 국가 통제경제의 마비에 가까운 경제 위기에 직면했던 북한 체제가 존립할 수 있었던 주요한 근거로 강력하고 억압적인 사회통제 기제의 유지와 일종의 생존규범으로 뿌리내린 일반 주민들의 고립분산적인 원자화 상태, 그리고 국제정치 수준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이해를 같이하는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정책 등을 예시하고 있다.⁵²⁾

50)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22~23쪽.

51)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28~437, 457쪽.

52) 최봉대, “북한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1999), 233~302쪽.

그러데 그는 억압적인 사회 통제 기제의 작동이나 주민들의 원자화 상태에 관한 논의들이 지배 권력의 체제 유지 역량 보유정도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일반 주민들이 이 지배체제를 어떤 맥락에서 수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위의 근거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심각한 경제위기,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행위 주체인 주민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구축하는 집단적인 사회 심리적 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힘의 원천으로서 ‘멘탈리티’를 설정하고 분석적 수준에서 북한주민들의 멘탈리티를 크게 집단주의, 온정주의,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주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서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집단주의적 의식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 특히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는 아직도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⁵³⁾ 요컨대 북한의 지배세력

53) 최봉대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와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 멘탈리티가 사회적 통합의 주요인으로 여전히 작동할 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멘탈리티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효과는 집단적인 역사적 체험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집합적 기억은 일차적으로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물적 토대인 한반도의 지리 공간적 특수성으로부터 선별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특히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 멘탈리티의 자주적 통일 지향성을 둘러싼 상징적 가치 체계의 전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효과는 본질적으로 영토 정체성에 집착하는 주민들의 집단공포 심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 멘탈리티는 경제 위기와 같은 대내적 안보 위기조차도 일정한 정도 무력화시켜 잠재적인 사회균열을 억제하고 봉인해 버릴 수도 있다. 위의 논문, 292~293쪽.

은 분단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대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에 필요한 두 개의 상징조작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그 하나는 미국과 남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위협세력을 제거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난과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증가 등 일반적인 체제이행의 요인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 기존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원인을 쿠바와의 비교론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해 보려는 시론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지하듯이 북한과 쿠바는 차이점도 있지만⁵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성도 있다. 우선 정치체제의 성격이 유사(전체주의 검술탄 체제 대 동결된 탈전체주의 검술탄 체제)하다. 또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식과 과정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

북한은 쿠바와 마찬가지로 체제의 성격상 위로부터의 체제이행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의 속성상 반대세력이 형성될 여지가 매우 협소하고 지배집단 내에 타협과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온건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따라서 북한과 쿠바에서의

54) 북한과 쿠바의 가장 다른 점은 북한이 분단국가이면서 인근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세력이 있는 데 반해서 쿠바는 분단국가가 아니고 인근에 후원 세력 없이 미국이라는 강력한 견제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체제이행은 결국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해서 추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체제이행은 동구, 특히 체코와 동독, 그리고 루마니아의 체제이행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핵심적인 조건을 구비해야 가능하다. 우선,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행동(시위나 봉기)으로 체제이행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행동을 전국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쿠바는 이러한 체제이행의 핵심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북한과 쿠바에서는 각기 ‘고난의 행군’과 ‘특별한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일탈과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나라, 특히 북한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주민 감시 및 통제메커니즘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대중시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을 강화하거나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도 북한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과 비정부 차원의 정보유통망 형성에 매우 소극적이다.

더욱이 북한과 쿠바는 이러한 체제이행 조건의 부재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통제하고 자발적 동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배집단의 정치적 자산이 있었다. 특히 북한은 집단주의와 온정주의,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 연유하는 탈식민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과 지지를 유도해 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통합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아직 기존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당분간 북한에서 체제이행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 체제 이행의 핵심적 조건은 북한 자체 내에

서는 아직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체제이행 조건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에 의해서 더 용이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 체제이행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체제이행이 국가붕괴로 이어질 위험성 때문에 북한의 체제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관 국가들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체제이행을 위해서 적극적 개입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접수: 7월 10일 / ■ 채택: 8월 16일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조치와 북한』(서울: 높이깊이, 2005).
- 김근식, “북한 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1999).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비교사회주의를 통해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서울: 해남, 2004).
-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통권 제 21호(1990년 5월).
- 서재진,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윤미량, “북한 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현대북한연구회 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I』(서울: 한울, 2005).
- 정영철, “사회통제와 조직생활의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변화』(서울: 한국방송, 2005).
- 최봉대, “북한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2호(1999).
- 최완규, “북한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1997).
- _____, “북한의 인사제도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2권 1호(1998).
- Adam Przeworski,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ransition to Democracy,” Guillermo O’Donnell et al.(eds.), *Transition from Authoritaria Rule: Compara-*

- tive Perspecti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허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북한 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Ana Julia Jatar-Hausmann, *The Cuban Way: Capitalism, Communism and Confrontation* (West Hartport, Connecticut: Kumarian Press, 1999).
- Andrei Codrescu, *The Hole in the Flag: A Romanian Exile's Story of Return and Revolution* (New York: William Morrow, 1991).
- Angus Campbell, Gerald Gurin and Warren Miller, *The Voter Decides* (Evaston, III: Row Peterson, 1954).
- C. J. Friedrich and Z. K.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5)
- Daniel N. Nelson, “Origins of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Donald H. Linden and Bert A. Rockman(eds.), *Elite Studies and Communist Politics* (Pittsburg: University of Pittsburg Press, 1984).
- Edward Gonzalez and Kevin F. McCarthy, *Cuba After Castro: Legacies, Challenge, and Impediments*. Santa Monica (California: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2004).
- Ellen Frankel Paul, *Totalitarianism at the Crossroads* (New Brunswick: Social Philosophy Policy Center, 1990).
- Erving Goffman, *Asylum: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r Inmates* (New York: Anchor Books, 1961).
- Gale Stokes, *The Walls Came Tumbling Down: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Howard J. Wiarda, “Is Next Cuba?: Crises of the Castro Regime,” *Problems of Communism* (Jan.-April, 1991).
- I. W. Zartman(ed.), *Collapsed State: the Disintegration and Restoraton of Legitimate Authority*. Boulder (Colorado: Lyunne Rienner, 1995).
- Jorge F. Perez-Lopez, ‘Cuba’s Second Economy: From Behind the Scenes to Center Stage’ (New Brunswick: Transaction, 1995).
- Jorge I. Dominguez, “The Secrets of Castro’s Staying Power,” *Foreign Affairs* (Spring 1993).
- Jorge I. Dominguez, et al.(eds.), *The Cuban Economy at the Start of the Twenty-First*

- Centu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Jose A. Moreno, "From Capitalist to Socialist Culture, and Back to Capitalist Values?" in Max A. Azcari and Elsis Deal(eds.), *Cuban Socialism in a New Century: Adversity, Survival, and Renewal* (Gaineville: Press of Florida, 2004).
-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Leonard Schapiro, *Totalitarianism* (New York: Praeger, 1972).
- Leslie Holmes, *Post-Communism: An Int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 Rasma Karklins and Roger Peterson, "Decision Calculus of Protesters and Regime: Eastern Europe 1989," *Journal of Politics*, Vol.55, No.3(August, 1993).
- Roger Petersen, *East, Revolutions in Eastern Europe* (London: Pinter, 1992).
- Steven Saxonberg, *The Fall: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d of Communism in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and Poland* (London: Routledge, 2001).
- Susan Eva Eckstein, *Back from the Future: Cuba under Castro*,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Timur Kuran, *Private Truths, Public Lives: The Social Consequences of Preference Falsifi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 Trond Giber,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Romania: The Rise and Fall of Ceausescu's Personal Dictatorship*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0).
- Vasily Mikheev, "Reform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Requirements, Plans and Hop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V, No.1(Summer 1993).
- Wan-Kyu Choi, "The Current State and Tasks of the Study of Change in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 South Korean Perspective," Chung-in Moon(ed.), *Understanding Regime Dynamics in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

Zbigniew Bre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Abstract

The Persistence of Nor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ban case

Wan-kyu Choi(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delves into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persistence of North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ban case. The demise of the socialist system ignited a worse economic predicament in North Korea, an isolated state in downward spiral. It also left the DPRK with difficult security choices. Indeed, the world witnessed the dramatic fall of the USSR, which consequently affected the East European states at the end of the 1980s. There existed a dominant perspective that North Korea would follow in the footsteps of its “socialist predecessor.” Nevertheless, the hermit kingdom has made significant strides in reinforcing its regime along with its political system by using every instrument of national power.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North Korea and Cuba can be delineated by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both share similar political traits (North Korea’s totalitarian regime vs Cuba’s post-

totalitarian regime); secondly, both have managed to pull through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nd lastly both nations still remain as firm “socialist heirs.” However, the prospects for complete regime transformation in both nations seem to be dim, as they lack any mass mobilization that could topple down the current regime. The increase in government surveillance in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is the core reason behind this political “backwardness.”

In a nutshell, a driving force for North Korea’s stable regime is rooted in state-centered control and management. The absence of mutual agreement on whether or not regime transformation in the DPRK is legitimate contributes to the prolonging of its regime.

Key Words: Persistence, Socialist State, Political Backwardness, Socialist Predecessor, Socialist Heir

필자 약력(계재순)

최완규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서,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1974)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유신 권위주의 체제의 성립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정치학 박사학위(1977)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1966), “세계화의 압력과 새로운 통일논의”(2000), “대북정책의 국내적 제약요인 분석”(2000) 등이 있다.